

통일한국의 사이버범죄 대응방안†

심연수*

<국문요약>

통일한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인본주의를 기저로 하는 한국헌법의 보편적인 정신을 토대로 보다 인류애와 민주공화국정신을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점을 본고에서 제기한다.

[주제어] 통일한국, 헌법, 사이버범죄

* 심연수(E-mail: shimys@honam.ac.kr)
학위취득대학: 서울대학교
현직: 호남대학교 경찰학과교수

†이 글은 2016년 11월29일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한 통일부 기획패널지원사업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확대한 것임. 또한 III장은 저자의 과거논문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수정한 것임.

논문접수일 : 2017년 1월 2일, 논문수정일 : 2017년 1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7년 2월 1일

Looking for a Solution to Cyber Crime in the Future Unified Korea

Shim, Yeon-soo

<Abstract>

The future constitution of a Unified Korea should be constructed by expanding and developing the spirit of humanity and democratic republic based on the universal spirit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founded on liberal democracy and humanism. In this paper,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cyber crime in South Korea as of 2016 are analyzed.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at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ultimately promoting the happiness of citizens.

[Keywords] *Unified Korea, Constitution, Cyber Crime*

I. 서론

2015년 10월21일 제70회 경찰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하여 “통일 한국의 치안 로드맵”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기초 치안 품질 향상에 토대를 둔 미래 치안환경에 대비한 ‘치안 청사진’의 완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통일한국을 대비해서 치안준비와 통일한국의 헌법에 기초한 사이버치안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보안과 범죄예방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증가시키고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¹⁾ 본 글은 통일을 대비하여 한국의 시점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먼저, 한국의 사이버범죄 현황과 개략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통일한국의 국가의 예측에 따른 헌법정신을 분석해 본다. 헌법정신에 입각한 하위 통제법인 사이버관련 법규의 모습을 디자인 해 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서술 과정에서는 결국 미래한국은 2016년 한국헌법의 창의적 발전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치판단 하에, 현행 대한민국의 사이버범죄를 규제하는 법규 개선방향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1) 영국 정부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3억달러(2조6450억원)를 투입한다고 IT월드가 2016년 11월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비즈니스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필립 해먼드(Philip Hammond) 영국 재무장관은 사이버보안 전략에 이 같은 예산을 2020년까지 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비슷한 사이버보안 전략에 들어간 예산의 두 배에 달한다.

II. 한국 사이버범죄 현황과 연구동향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가 2015년 7월 23일 '미래이슈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0년 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주요 이슈들로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 기후변화, 고용변화, 남북문제 등 정치이슈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²⁾ 그동안 사이버범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한국 학자들의 대체적인 유형 제시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범죄를 해킹 바이러스,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 불법복제와 같은 유형들을 살펴보고 경찰의 현행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사이버범죄 관련 조기교육 도입, 오픈 소스 형태의 대응메뉴얼 개발과 사이버범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하였다(박창욱 139-146). 그리고 경찰청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유형을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사이버공간을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형으로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은 범죄를 일반 사이버범죄로 구분 제시하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검찰청에서 제시하는 사이버범죄도 제시하고 있다(이규안 224-225; 임채호·김지영·최진혁 116).

이들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해킹, 정보통신망 불법 침입, 정보통신망 관련 업무교란, 방해, 마비, 악성

2)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2766>(검색일 2016년 11월7일).

프로그램 유포, 개인정보 탈취 판매, 온라인 게임 계정/아이템 탈취 등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로서 온라인사기(물품, 피싱), 온라인 도박, 온라인 저작권 침해, 음란물 유포, 스팸 메일 발송, 온라인 불법광고,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구분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 달리 유형분류가 있다고 하면서 David Wall과 경찰청의 분류방법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김상운·조현빈 143-144). 여러 학자들과 경찰청의 유형을 비교·제시한 연구(김영환 166), 그리고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이버범죄를 전자적 침해행위로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스팸메일을 다루고 현행 처벌법규를 제시하면서 온라인게임아이템불법취득과 사이버 명예훼손, 그리고 지적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해서 다른 연구도 있다(채희정 229-261).

이와 같은 사이버범죄유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사이버범죄의 다양한 유형을 해킹범죄, 컴퓨터바이러스침투범죄, 스팸메일전송범죄, 컴퓨터프로그램 부정사용 범죄, 사이버스토킹범죄, 인터넷포로노범죄, 인터넷선거범죄, 사이버테러범죄 등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³⁾

한편, 한국의 경찰청 통계분석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사이버범죄는 <표1><표2>와 같이 나타난다.⁴⁾ 사이버 테러형 범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이버일반범죄는 꾸준히 발생빈도수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2013년까지 최근 10여년 간은 그 발생빈도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 반면에 2013년도에 사이버일반범죄는 14만여건

3) 유용봉, 『인터넷범죄와 형법』, 서울:21세기사, 2005. 참조해서 논자가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임.

4)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11>(검색일2016년11월17일)

에 달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범죄가 2015년에 12만 건에 육박하여 제일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불법콘텐츠범죄가 2만3천여건,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3천여건에 불과하였다. 이런 추이분석을 통해서 통일을 대비한 한국사회의 사이버사회의 보다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표 2 한국사회의 사이버범죄 통계

연도	사이버범죄발생건수
2004	77,099
2005	88,731
2006	82,186
2007	88,847
2008	136,819
2009	164,536
2010	122,902
2011	116,961
2012	108,223
2013	155,366
2014	110,109
2015	114,679

표 1 한국사회의 사이버범죄 통계

구분 연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 범죄	
	발생	검거 건수	발생	검거 건수
2004	15,390	10,993	61,709	52,391
2005	21,389	15,874	67,342	56,547
2006	20,186	15,979	62,000	54,566
2007	17,671	14,037	71,176	64,853
2008	20,077	16,953	116,742	105,274
2009	16,601	13,152	147,935	133,917
2010	18,287	14,874	104,615	88,935

2011	13,396	10,299	103,565	81,197
2012	9,607	6,371	98,616	78,561
2013	10,407	4,532	144,959	81,573

Ⅲ. 통일국가론과 사이버범죄

통일이후를 대비해서 통일국가론과 오랜 시일 상이한 국가통치이념에 따라 결정된 상이한 생활방식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심연수 1995, 45-66; 심연수 1993, 63-64). 남북한의 주민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해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정신적 원리를 갖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미래 통일국가의 이념형태를 기초로 할 것이다(황병덕 1995; 황병덕 1993; 방영준 1994; 김학준).

인간중심주의적인 통일국가의 이데올로기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성과 국민으로서의 특수성이 조화를 이루게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결을 통해 표면화된 장단점들도 검토되어 자본주의가 갖는 장점인 이익사회적 능률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사회적 유대를 갖는 공동체주의가 접목된다.

인류역사의 보편성에 따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통일한국의 주된 이데올로기로서 구성된다.⁵⁾ 통일국가의 민주주의는 전통적 자유주의의 정신에 충실한 민주주의가 된다.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전체사회의 공동선을 다수결이라는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의사 결정 방식으로 추구해 나

5)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노동자, 농민 등 근로 인민대중 중심의 계급적 성격을 띤 북한식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가는 이데올로기이다. 통일한국의 민주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정신에 충실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상이한 체제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서로간의 이념 생활방식 등이 판이하게 달랐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다른 국가가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국가가 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통일이후에 남북한 주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통일 초기에는 상호 오랫동안 이질화된 체계를 점차적인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이질감을 완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서 북한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완전한 통합이 될 수 있다.

통일국가론은 “통일된 국가를 위해서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서 현재 변화되어야 할 것과 앞으로의 통일을 이룬 다음 다원화된 사회분열을 억제하고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공권력”⁶⁾을 중심으로 한다. 통일이후에 통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합위기를 생각해 보면 역으로 남북한이 공히 대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근대화의 모델에 따르면 근대화 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의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이용필 1993, 223). 정치체의 측면에서는 침투, 참여, 정통성, 정체성 위기가 발생되고 경제의 측면에서는 배분의 위기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의 하위기능 중에서 목표성취의 기능은 정치체의 안정을 위해서 수행되며 적응의 기능은 경제의 효율화와 분배를 위해서 수행된다.

6)국가론은 공권력에 관한 이론이라는 앤소니 기든스의 논리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한국인들에게 요구되는 측면들을 고려해 이러한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능은 내적환류루프에 의해서 연계되며 국가는 정치체와 경제의 복합적 적응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환경으로 부터의 중압에 대응해 나간다. 국가는 가치의 정치적 배분과 가치의 경제적 배분을 위한 투입과 산출의 복합적 연계인 환류기능에 의해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수행한다. 통일국가는 남북한 주민들의 요구중압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구조와 메카니즘, 그리고 복합적 환류기능 등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된다. 통일국가가 갖는 공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는 다음의 몇 가지의 공권력의 근원에 관한 논의를 기초로 할 것이다.⁷⁾

먼저 북한이 절대주의에 버금가는 주체사상을 제시하여 급기야는 북한주민의 세계관으로 까지 확대시켰다. 통일국가에 있어서는 '절대주의'의식에 길들여져 있었던 북한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사고행동에 익숙한 남한주민들과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통일국가가 문화통합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공권력을 개입하게 된다면 일정시간 권위주의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 문화의 자생력을 저하시켜서 통일문화가 문화적 제국주의에 취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의 사회조직이 문화통합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우영). 그리고 남북한이 상호의존적 일관성을 갖고 동류의식을 형성하여 합일된 상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을 이룬 후에도 통합문제는 통일국가의 중대과제가 되며 다양한 사회통합의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통합과 문화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기본 원리가 필요하다. 그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공권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입헌주의 국가론(배규한)에 기초한 통일국가헌법을 설계해 볼 수 있다. 통일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은 입헌주의의 주체가 된다. 통일국가의 국민들은 입헌주의 국가의 성공의 열쇠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이전 부터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배양해나가도록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개인보호를 위해 통일국가는 입헌주의의 핵심인 개인의 가치관과 입헌국가의 기본적 가치이자 권리인 평등한 자유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입헌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독점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입헌주의적 국가는 자유, 평등, 개인의 권리와 같은 어떤 기본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하여 권위를 다원화시키고 질서 있는 변화를 유지해 가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 제도적 장치들로는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헌법과 연방제 등이 있다. 또한, 국가는 인간 존재의 본질 혹은 합리적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내적 본질로부터 발전해 나왔다. 국가와 개인은 공통적인 본질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도덕국가론은 형이상학에 근거를 둔다. 인간의 본질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이다. 철학·도덕·정치적 원리를 남북한의 관습과 공동체의 습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통일국가의 헌법은 통일국가의 생명과 더불어 발전되고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다. 도덕국가는 개인과 국가관계를 동일시한다. 국가는 공동체적인 결속으로 결합되며 도덕적 목적을 향하고 있다. 통일국가는 사적인 권리들이 공동체적 목적으로 나타나도록 인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도덕국가론에 기초한 통일국가는

7)절대국가론, 입헌국가론, 도덕국가론, 계급국가론, 다원국가론 등으로 국가공권력을 논하는 앤드류 빈센트 저술에 토대를 둔다. Andrew Vincent, *Theories of the State*(Ney York:Basil Blackwell,1987).

합의된 규범의 목적이거나 사회제도에 맞추어진 틀에 발맞추어 나가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입헌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적인 국가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계급주의, 폐쇄적, 사회주의적인 국가론적 특성을 갖고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의 이념과 가치관 이외에도 격심한 문화, 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도덕국가론은 통일국가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실정에 많은 시사점을 내포한다. 도덕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통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다. 도덕국가는 자유의식의 최고발전이며 강력한 규칙의 틀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국민의식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 도덕국가의 시민들이 국가의 제도적 구조 속에서 윤리적 의미를 발견하고 법률과 정치적 구조 속에서 자기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구체화하는 윤리적 제도로서 통일국가는 작동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공권력의 정당성은 다원주의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원주의는 철학적, 도덕적, 문화적, 정치적 다원주의 개념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경쟁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직과 권력획득을 위한 기회가 개방된다(황병덕 1994, 68).

다원주의 국가론의 단점은 개인이 집단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집단은 과도적 엘리트들에 의해서 지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통일국가는 어느 한 곳으로 권력이 집중되

지 않고 분산되어 분산된 권력이 주권배제가 아닌 견제와 조정의 의미로 파악되어서 소수 엘리트에 의한 권력독점을 막아야 한다. 다원 국가론에 있어서 공권력은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집단들의 총체이다. 여러 집단들은 흡수되지 않은 채 통합되어 있다. 다원주의 이념은 다양한 문화에서 특히 집단들이 다양하게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집단들이 현실주의적으로 사회와 국가를 조종해 나가게 된다. 통일이후에는 이와 같은 이익의 다원화 경향이 심화·확대될 것이다.

다원주의는 통일이후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과거 대한민국 지역에만 작동될 가능성이 더 높다. 북한주민들이 오랫동안 일인독재하의 공산주의적 생활방식에서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사유재산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을 하면 상당한 혼란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경제적인 이중적인 부담이 가해지므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40년이 넘게 분단된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의 관습이나 문화에는 차이가 심할 것이다. 이 간격이 생긴 것을 포용하는 사고가 요구된다. 다원주의적 국가는 공동생활을 가지고 다양한 여러 집단으로 통합된 그리고 보다 진전되고 보다 높은 집단으로 보다 포괄적인 공통목표를 지닌 개인들의 결사체이다. 다원주의적 국가는 포괄적인 권위 내에서 집단생활의 최대한의 다양성을 통합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의 이질화를 해소시키는 원리로서의 다원주의가 고려된다.

통일국가의 형태는 어떤 공권력에 기초를 둔 국가론에 입각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통일국가는 통일국가의 국민들의 가치관과 분리시킬 수 없다. 남북한 국민의 공통적인 가치관이 공적인 권위로 형성되어 국가의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론적인 입장에

8) 국가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이것을 다수의 단체에 분할하려고 하는 견해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일반적능단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서 본다면 자유, 평등, 개인의 권리와 같은 어떤 기본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권위를 다원화 시키고 질서 있는 변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통일국가에는 사상적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권리와 평등을 보호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며 공동체 목표를 갖게 만들어 개인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일국가는 진정한 통합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통일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공동의 목표를 갖는 통일국가의 상들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통일국가의 국가특성은 통일헌법으로 규정된다. 통일헌법의 전문에서 제시되어야 할 기본 이념으로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권존중주의, 문화국가주의, 국제평화주의, 복지국가주의 등이 있다. 이런 헌법적 이념은 남한과 북한이 남한에 의해서 흡수된 이후의 국가에서의 헌법이다. 그러나 흡수통일이 된 이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갈등이 노정될 것이므로 과도적으로는 양쪽의 이념을 남한이념의 상대적 우위에 비추어 융합할 수 있다.

만약 흡수통일이 멀어지고 기능적 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해오고 보편성이 있는 남한의 헌법적 이념이 통일국가의 기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자유 민주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이념이 골격을 이룰 것이다. 헌법적인 의미를 떠나서 개념상의 통일국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헌법과 유리된 통일국가는 하나의 이념형에 불과하다(권영성·신우철 70-71). 그리고 국제법상의 통일국가는 국제공동

체상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보다 현실적이고 세계시민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일국가는 영속하는 인구, 일정한 영역, 정부 그리고 타국과 국제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다.

통일국가의 헌법은 기능적 수렴이론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그런 헌법정신은 스펀오버(spillover)효과에 의해서 체제적으로 취약했던 북한 사회시스템을 개혁시켜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이후에는 한국의 헌법 체제하에 발생했던 각종 사이버범죄들에 대한 대응방안들은 지속될 것이고 2016년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사이버 법률안에 대한 논쟁 역시 더욱 촉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IV. 통일국가의 사이버범죄안전망

2016년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들어와 있는 수가 3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실정에 어둡고, 비교적 한국사회의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은 층을 구성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치관이 다른 한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필요하다. 수사와 검거, 기소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나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전자금융 사기범죄가 해외 거점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체제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전적인 경제금융교육과 정보화교육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대처능력을 함양시켜줄 필요가 있다. 각종 범죄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

기 위한 노력은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의 통일역량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희철 69-110).

FBI 범죄분류(CCM)에 따르면, 컴퓨터범죄, 사이버범죄, 인터넷아동성범죄 등으로 사이버범죄를 대별하여 제시하고 있다(Douglas et al. 2006, 384-436). 먼저 컴퓨터 범죄에 관련하여서는 대상 컴퓨터, 악성 소프트웨어, 대상 컴퓨터 데이터서비스 거부, 대상 컴퓨터 사용자, 신분 도용, 사생활 침해, 사이버 스토킹, 범죄 기업, 돈 세탁, 아동 포르노, 인터넷 사기(은행 사기, 사기성 인터넷 거래), 인터넷을 통한 위협 등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사이버범죄에 관련하여서는 대인간 폭력, 아동 포르노, 화이트 칼라 범죄, 극단주의자 그룹 등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아동성범죄와 관련하여서 아동성범죄를 위해서 아동성을 거래하는 상인들은 아동 포르노 소지, 아동과의 성행위, 아동 포르노물 제작, 아동 포르노물 배포, 포르노물 수집과 연관되어 범죄행위를 한다. 아동과의 성행위를 위해서 여행을 하는 자들은 범법자, 가학적 성행위, 살인, 국제적 여행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다. 아동성을 거래하는 상인들과 또한 여행을 하면서 추구하는 거래자 특성을 적정하게 혼합하여 추구하는 범죄자들은 가학적 성행위, 그리고 웹 사이트를 사용하는 범죄적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우선 통일대비 한국사회의 사이버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음으로는 통일이후 한국사회의 사이버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 해나가야 한다.

2016년 11월 현재의 사이버안전망 구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점은 실질적으로 사이버선진국으로서의 규제 처벌 법규가 매우 미흡

하다. 통일된 사이버법규 제정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는 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사이버세계에서 침식되는 국민의 행복권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으로는 보장받지 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9월말 현재 한국의 16개 시중은행과 우체국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고객 수가 전반기 대비 165만명(1.4%) 증가한 1억2000만명으로 나타났다. 은행 별 계좌를 통해 중복 합산된 수치를 제외하면 지난 1년 간 5567만명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뱅킹의 상승세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2016년 3분기 기준 모바일뱅킹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약 5400만건, 이용금액은 3조원을 넘어서서 2011년 당시 하루 평균 이용건수가 1000만건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2015년 이후 금융보안이 금융사 별 자율 규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금융사 자체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해킹없는 안전한 금융거래를 담보할 수밖에 없다. 악성코드와 해킹 등의 금융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금융사들의 보안체계와 마찬가지로 통일 법체계확립은 통일대비해서 모색해야 한다.⁹⁾ 그리고 영국의 컴퓨터남용법(Computer Misuse Act)과 미국의 Computer Crime and Abuse Act과 같은 법률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중국의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법을 마련하였는데 조속히 '사이버테러법'을 마련해야 한다.¹⁰⁾

9) <http://www.dailian.co.kr/news/view/598117>(검색일 2016년 11월21일).

10) 중국은 2016년 11월 이전에 이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포함한 다수의 외국 인터넷 서비스를 막아놓고 있었다. 이 법에 의하면 사회주의 시스

스팸메일전송범죄와 관련해서는 2016년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권리를 국민의 행복추구권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스팸메일이 반복되어 전송될 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고발하려는 자율의지가 약하고 상업적 이익을 보장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옵트인(Opt-in)은 당사자가 개인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기 전 까지 당사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반대로 옵트아웃(Opt-out) 방식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보내지는 스팸 메일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e-메일을 비롯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를 권장해준다. 2016년 한국은 옵트아웃방식으로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일정부분 박탈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많은 범죄온상이 확산되었다고 생각한다. 통일대비해서는 국민행복권을 위해서 옵트아웃방식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통일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법제화를 추구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스토킹은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지만 일종의 폭력 행위이다. 사이버스토킹은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이메일·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사이버 스토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협박·폭행·살인 등의 범죄로 발전되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스토킹이 범법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한데, 상황에 따른 법적 처벌

템에 대한 타도, 국가 분열 조장, 국민 결속 약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지지하거나 할 의도가 보이는 온라인 활동은 금지된다. 인터넷실명제를 기반으로 한다.

조항은 다음과 같다. 폭언, 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는 협박죄를 적용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적용한다. 반복적으로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조 제3항을 적용한다.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주거침입죄를 적용한다.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경우에는 상해죄, 폭행치상죄를 적용하지만 스토킹과 우울증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단발성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이나 구류 등에 그치고 있다.¹¹⁾ 통일대비해서 스토킹문화가 일정정도 만연되어 있는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하면 하루 속히 스토킹방지법과 사이버스토킹법이 제정을 모색해야 한다.¹²⁾

2016년 4월13일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행위가 4년전 19대 총

11) 2012년 2월 27일,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처벌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스토킹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이 법에 근거해 스토킹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12)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50개 주에서 '반스토킹법'이 제정되어 있고 스토킹 범 죄자에게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독일은 2007년 스토킹 방지법을 만들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선 때의 10배 수준에 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4·13 총선에서 적발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은 모두 1만7천403건이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의 1천793건의 약 10배이며, 같은 해 있었던 18대 대통령선거 때의 7천201건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이 19대 총선 때 720건에서 20대 총선에서는 4천888건,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도 같은 기간 517건에서 5천662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이 급증함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선관위의 관련 제재도 19대 총선 당시 67건에 그쳤으나 20대 총선에서는 3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8대 대선에서는 42건이었다.¹³⁾

공직선거법의 사이버선거 범죄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향후 통일한국에서는 시정되어 실명제가 합헌이 되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란 선거마케팅을 촉진시켜주는 장점이 있으나 공기관의 정치선거참여에 대한 끝없는 논쟁을 유발할 것이다. 특히 통일 이전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신뢰가 매우 떨어진 사회이다. 선거가 끝난 후 부정선거시비와 소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은 국가공기관의 불법선거연루 의혹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는 반드시 사이버선거범죄를 제한시키기 위한 선결조건들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사이버테러범죄는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로서 그 피해규모가

엄청나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와는 구별된다. 2011년 3월에 북한공격에 의해 한국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공격하여 홈페이지를 다운시킨 3.4디도스 사건은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사이버테러에 대한 예방과 방어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2011년 5월에는 북한 정찰총국이 악성코드(좀비 PC)를 통해 농협서버파일을 삭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금전요구는 없었으나 사회혼란을 야기하였다.

2011년 7월에는 중국IP가 SK컴즈를 공격하였는데 이때는 악성코드와 자동업데이트파일을 이용하였고 당시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사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의 문제점으로는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기업의 낮은 보안의식, 이용자 권리행사부족, 누장신고와 처벌규정의 미흡, 불법소프트웨어사용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통일대비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으로는 정보유출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개인정보수집제한대상의 확대, 국가보안체계정비, 업체보안전담조직구성, 국제협력강화 등이 제시될 수 있다.

V. 결론

통일한국에 대비해서 한국의 시각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방안들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는데, 결국 통일한국에서는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안전망을 확대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통일이후 주민들에 대한 사이버안전교육과 사회화를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연히 통일헌법에 의거한 사이버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법제도가 요구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미래의 통일국가론에 대

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8/0200000000AKR20160918023900001.HTML>(검색일 2016년11월21일)

한 확실성이 그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의 사이버범죄안전망 구축을 위한 하나의 예시적 글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성을 갖는다. 다만 2016년 대한민국의 사이버범죄의 현황 및 법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확대된 점에서도 본 논문은 그 한계를 갖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영성·신우철. 1993. “남북통합과 국가형태 국가체제문제”. 『서울대학교법학』 34 (1).
- 권태준. 1995. “국가목표와 지역환경운동”. 『철학과 현실』 가을.
- 김상운·조현빈, 2013. “민간경비를 활용한 사이버범죄 예방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3).
- 김영환, 2009.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의 이론적 함의: 사이버테러형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14 (6).
- 김명기. 1994. “통일한국의 헌법”. 『통일한국』 125.
- 김태길. 1995. “한국의 장래와 한국인의 선택”. 『철학과 현실』 가을.
- 김학준.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 『통일이념문제』 21.
- 김희철, 2016. “북한이탈주민의 전자금융 사기 범죄 대응방안 고찰”, 『북한학보』 41 (1).
- 박상섭. 1995. “서구근대국가 형성과정에 비추어 본 한국국가의 문제”. 『철학과 현실』.
- 박창욱, 2007.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경찰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15 (2).
- 방영준. 1994.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이념”. 『사회과학논총』 6.
- 배규한, 1995. “통일이후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 『광복50주년기념 한미국제학술회의; 세계속의 한국-과거,현재,미래』11: 2-3.
- 손호철. 1995. “한국의 국가목표-반성적 회고” 『철학과 현실』.
- 심연수. 1993. “통일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윤리 이념교육적 과제.” 『호남대학교논문집』 14: 63-64.
- _____. 1995. “통일한국'에 대한 국가론적 설계.” 『인문사회과학연구』 45-66.
- 이규안, 2012.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처방안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학술대회지 6(1).
- 이우영, 1995. “문화통합의 과제와 전망”, 『광복50주년기념 한미국제학술회의; 세계속의 한국-과거,현재,미래』 2-3.
- 이용필. 1993. 『현대정치경제학-이론과 방법』. 서울:신유.
- 임채호·김지영·최진혁, 2009. 심리적 보안관점에서 사이버범죄 프로파일링,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9 (4).
- 채희정, 2015. “사이버범죄에 대한 재조명”. 『과학기술과 법』 6 (2).
- 통일원. 1993. 『김영삼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 서울:통일원교육홍보국.
- 한정일. 1994.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체제”. 『행정연구』 18.
- 황병덕. 1993. “통일조국의 이념”. 『통일문제연구』 19.
- _____. 1994. “통일조국의 이념”, 『통일한국』 125.
- _____. 1995. “통일한국 정치이념의 이론적 착상”. 『통일문제연구』 23.
- 홍승직. 1994.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가치 모색”.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 16.
- 한겨레신문. 1995년 8월 10일자.

Non-Korean References

- Douglas, John E., Ann W. Burgess, Allen G. Burgess, and Robert K. Ressler. 2006. *Crime Classification Manual: A Standard System for Investigating and Classifying Violent Crime*,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Olson. Mancur L.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최광 역. 『국가의 흥망성쇠』.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1. [If this is a Korean translation it belongs in the Korean section entirely in Hangeul]
- Vincent, Andrew. 1987. *Theories of the State*. New York: Basil Blackwell.
- Wiarda. Howard J. 1993. *Introduction to Comparative Politics*. Belmont: Wadsworth.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Kwon Young-sung and Shin Woo-cheol. 1993. "Korean Unification and the Staatsform of a State." *Seoul Law Journal* 34(1).
- Kwon Tae-joon. 1995. "National Goals and Regional Environmental Movements." *Philosophy & Reality*(Fall).
- Kim Sang-woon and Jo Hyun-bin. 2013. "Prevention Methods of Cyber-crimes using the Private Secur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s* 13(3).
- Kim Young-hwan. 2009. "Theoretical Implication on Establishing the National Countermeasure System against Cyber Crime: Focusing on a Pattern of Cyber Terror."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4(6). 2009.6.
- Kim Myung-ki. 1994 "The Constitution of Unification Korea". *Unification Korea* 125. The Institute for Peace Affairs.
- Kim Tae-gil. 1995. "Korea's future and Koreans' choice." *Philosophy & Reality*(Fall).
- Kim Hak-jun. "Korean Nationalism as a Unification Ideology."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6(1).
- Kim Hee-chul. 2016. "The Research for Preventing North Korean Defectors from Financial Crimes."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41(1).
- Park Sang-sup. 1995. "The Problem of the Korean State in Light of the Western Modern State Formation Process." *Philosophy & Reality*(Fall).
- Park Chang-wook. 2007. "A Study on Effective Response of Police Officer against Cybercrime." *Proceeding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5(2).
- Bang Young-jun. 1994. "The Future and Ideology of Unificatio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6.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 Bae Gyu-han. 1995. "The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The Proceeding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5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Korea: The Korea in the World: Past, Present and Future*. Kookmin University Social Science Institute
- Son Ho-chul. 1995. "Korea's National Goals-Reflective Recall." *Philosophy & Reality*(Fall).
- Sim Youn-soo. 1993. Ethical and Ideological Educational Issues for North Korean Residents after Unification." *Journal of Honam University* 14.
- _____. 1995. "Theoretical Design of the State for 'Unification Korea.'"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
- Lee Gyu-an. 2012. "New Aspects of Cyber Crime and Countermeasures."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6(1).
- Lee Woo-young. 1995. "Challenges and Prospects of Cultural Integration." *The*

- Proceeding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5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Korea: The Korea in the World: Past, Present and Future.* Kookmin University Social Science Institute
- Lee Yong-phil. 1993. *Modern Political Economy-Theories and Methods.* Seoul: Shin Yoo.
- Lim Chae-ho. Kim Jee-young and Choi Jin-hyuk. 2009. "Profiling of Cyber-crime by Psychological View."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19(4).
- Chae Hee-jeong. 2015. "Review of Cyber-Crime in Criminal Law." *Science, Technology and Law* 6(2).
- The Ministry of Unification. 1993. Kim Young-sam Government's Three-Phase 3 Key Unification Policy.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Education Promotion Bureau.
- Han Jeong-il. 1994. "New Ideology and System of Unification Korea." *Administrative Research* 18.
- Hwang Byung-duck. 1993. "Ideology of the Unification Country."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19. The Ministry of Unification.
- _____, 1994. "Ideology of the Unification Country." *Unification Korea* 125. The Institute for Peace Affairs.
- _____. 1995. "Theoretical Implications of Unification Korean Political Ideology."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3. The Institute for Peace Affairs.
- Hong Seung-jik. "Seeking Common Values in Inter-Korean Relations." *The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 16. The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e of Yeungnam University.
- The Hankyoreh* (newspaper). 1995. 10 August.
- Olson. Mancur L. 1991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Choi Gwang trans. Seoul: The Korea Economic Daily.